

보 도 자 료

배포 날짜

2026. 7. 3. (금)

총 3페이지

2026년 7월 3일 부산광역시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릴레이 성명발표 14

구 분

보도요청

수 신

각 언론사 여성·아동 담당

발 신

성착취(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전국 네트워크

담 당

성착취(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전국 네트워크
십대여성인권센터 서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 팀장 한다숨
www.teen-up.com / 02) 6348-1318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0 대일빌딩 7층

릴레이
성명발표
담당

센터명

부산광역시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총 3장

담당자

최선경 센터장

연락처

051-303-9626

성 명 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는 국가 방치가 낳은 인재(人災)다.

국가는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고,
실효성 있는 전방위적 지원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성착취 범주는 더 이상 일부의 일탈이 아니다. SNS, 메신저,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우리 사회 깊숙이 암세포처럼 확산된 지 오래다. 범죄 수법은 날로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으며, 피해 연령은 끔찍할 정도로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 참혹한 현실 앞에서도 국가는 철저히 무능했고, 대형 플랫폼 사업자는 책임을 회피했으며, 사법 체계는 가해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남발했다. 그 결과 수많은 아동·청소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성착취의 지옥 속에 방치되어 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국가가 관리·감독이라는 최소한의 의무마저 방기했기 때문이다. 최근 시행된 X(구 트위터)의 청소년 이용 제한 조치 역시 이미 수많은 아동·청소년들이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입고 난 뒤에야 나온 뒤늦은 조치이며, 이마저도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2020년 'N번방 사건' 이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묻는 시민사회의 단체 행동이 지속적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하였는가?

국내 대형 플랫폼(네이버, 카카오 등)은 법 개정 이후 필터링 시스템을 강제로 도입했으나 문제는 국내 이용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텔레그램, 디스코드, X(트위터) 등 해외 플랫폼의 규제 사각지대다. 해외의 경우, 프랑스 검찰이 2024년 8월 텔레그램 내 아동 성착취물 유통과 마약 밀매 등의 범죄를 방치하고 사법 당국에 협조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창업자이자 CEO인 파벨 두로프를 프랑스 공항에서 전격 체포·기소한 바 있다. 이는 프랑스가 2023년 "조직적 범죄자가 불법 거래나 범죄를 저지르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방치·운영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조치였다. 범죄의 온상이 된 플랫폼에 직접 책임을 묻는 국제적 흐름 속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은 안일하기 짝이 없다.

사법부의 온정주의적 태도 또한 범죄를 키우는 온상이다. 성평등가족부가 발표한 통계인 '2025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 및 동향 분석'(2024년까지 확정된 판결문 분석)에 따르면, 여전히 전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집행유예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법원 최종심 선고 결과의 비율을 보면 집행유예 57.1%, 징역형(실형) 37.3%, 벌금형 4.7%로 집행유예가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법원은 여전히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 불원, 초범, 범행 인정 및 반성, 실질적 구금 기간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

이러한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전국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센터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들의 마지막 울타리가 되어주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피해아동·청소년 발견부터 긴급 보호, 심리·정서 회복, 법률 지원, 나아가 학업 및 사회 복귀 지원에 이르기까지, 상처 입은 아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안전망의 최전선을 지켜왔다.

그러나 아동·청소년들을 살려내겠다는 현장의 처절한 사명감만으로는 이 거대한 범죄의 파도를 막아설 수 없다. 현재 부산 센터(드림스텝)를 비롯한 전국의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체계는 인력과 예산, 제도적 지원의 부재 속에 심각한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날로 급증하는 피해 규모와 잔혹해지는 범죄 수법 앞에서도, 현장은 고작 종사자 3인이 다수의 고위험·고난도 사례를 온몸으로 감당해 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필연적인 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종사자들의 심각한 소진과 이직으로 이어져 지원 체계의 연속성을 위협하고 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범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대폭 확충과 현

장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국가가 해야 할 사회적 책무를 현장의 상담원들에게 온전히 떠넘긴 결과, 아동·청소년 지원 체계 자체가 무너져 내릴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처럼 플랫폼 사업자는 범죄의 판을 깔아주고, 사법부는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며, 국가는 현장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삼중고 속에서 우리 아동·청소년들은 갈 곳을 잃고 있다. 언제까지 아동·청소년들의 고통을 담보로 플랫폼의 방조와 사법부의 온정주의를 지켜보아야 하는가!

이에 부산광역시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는 '정부가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전방위적 지원 대책을 즉각 수립하고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국가는 더 이상 해외 플랫폼이라는 핑계 뒤에 숨지 말고, 국내 및 해외 플랫폼 사업자를 모두 아우르는 기술적·법적 책임을 강제하는 강력한 사전 규제법을 마련하라.

하나, 사법부는 성착취 범죄에 대한 용서 없는 엄중한 처벌로 사법 정의를 실현하여 피해 아동·청소년과 부모를 좌절 속에 방치하지 말라. 기계적인 반성문과 기습 공탁 등 가해자 중심의 형식적인 감형 사유 적용을 즉각 중단하고, 무너진 양형 기준의 실효성을 엄격히 회복하라.

하나, 정부는 피해 아동·청소년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현재 3명의 상담원 체제에 의존하는 한계적 단기 사업 구조를 철폐하라. 아울러 실효성 있는 통합 사례 관리(상담·법률·의료·학업·치료 회복·아웃리치 등)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전국의 센터를 정식 시설로 전환하고 그에 걸맞은 인원 충원과 운영 예산을 확립하라.

지금 이 순간에도 보호와 회복이 필요한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존재한다. 정부는 더 이상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부산광역시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드림스텝'은 피해 아동·청소년의 안전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이며, 국가의 책임 있는 정책 변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행동할 것이다. <끝>

2026. 7. 3.

부산광역시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장

